대통령 후보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서면 질의 · 답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서면질의(별첨 서면질의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서면 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이었으며, 각 당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편집 형태를 통일하여 전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당의 답변서는 현재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면 부족으로 주요 당의 고등교육정책만을 게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註】

1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 창

▷ 고등교육의 목표는 어느 나라나 국민 보통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고, 사회와 국가는 존속과 발전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다른 선진국 등에 비하여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자율화, 특성화, 대학간의 역할분담과 정보화 및 세계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를 첫째는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들이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대학특성을 살려 세계무대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완전자율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율성 제고를 통해 다양화, 특성화를 기하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간, 대학 내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노 무 현

□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 분권화와 민주화의 맥락에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수평적 리더십의 기반에서 교육공동체를 성숙시키고 현실적합성을 높이도록 교육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 정보시대 평생학습의 이념 아래 교육체제를 내실화·자율화·다양화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정책의 기조

- 지식국가·문화국가의 기반을 교육혁신으로 성취하겠습니다.
- 학교체제를 내실화·자율화·다양화하며, '생동감 있고 즐거우며 머물고 싶은' 학교, '학교다운 학교'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력과 책무성을 함께 연계하는 등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분권화와 민주화의 맥락에서 학교의 수평적 리더십을 확립함으로써, 단위 학교에

서 교육주체의 자치와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교육발전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도시서민과 농어민의 교육상 혜택을 높이고, 학교가 '삶의 질'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의 자치, 고등교육 체제의 복선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대 중점육성을 통해 대학 서열화와 학벌 사회를 타파하여 능력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을 동양문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동북아의 중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국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 21세기 정보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자율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 지향적이며 참여적 민주시민
- 특히, 평생학습시대에 정보와 지식의 조직·관리·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능력을 가진 창조적 인재
- 한국현실에 뿌리박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적 주체성과 자부심을 유지하며 세계화에 능동적인 열린 세계시민

▷ 임기 내 교육부문에서 할 일

- 교육혁신으로 지식국가·문화국가의 기반을 성취
-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살리기 및 교육 희망 세워나가기, 교사 처우의 획기적 개선과 위상 강화 및 권위 회복·자부심 고취
- 대학 서열화 극복과 학벌사회 타파
- 분권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의 확립
- 대학의 자치 확립과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지방대학의 중점육성
- 사람과 지식을 기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도약
- 사학개혁 :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
- 유아교육개혁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무상화
-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여 교육개혁 자체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해나갈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책의 누적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개혁 · 교육행정 개혁
-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 교육재정개혁 · 교육예산 제도 개선

□ 교육의 정책순위

- 교육은 지식국가 · 문화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고, 한 나라의 문화와 복지 및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반이자 미래이며, 나아가 진정한 잠재력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그러하였듯이, 자본이 있는 곳에 정보와 사람이 모였지만 이제는 우수한 사람(人才 · 人的資源)이 있는 곳에 지식과 정보 및 기술, 그리고 자본이 모여드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이제는 '사람만이 희망'인 현실에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책적 우선순위의 으뜸에 두어야 하며, 저는 말뿐인 '교육대통령'이 아니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 15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선택해 활동해 온 의정활동이 입증하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교육재정 투여방식을 정책목표 연계투자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 대학이 자치(自治)를 통해 지역사회 ·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하며, 지방대학 중점육성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육 자율화의 제도화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
- 고등교육 정책은 '자율화의 제도화'를 기조로 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전면 확대하고, 학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교육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체제개편과 발전방안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획 · 심의 ·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교육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인 결속, 나아가 성장능력의 창출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그 중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는 국가인적자원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은 대학의 자율화,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각 지방대학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

▷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민주적 사회환동, 공동체 생활, 노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내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그 동안의 정부와 지배세력은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교육을 동원하고, 교육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민중에게 교육 부담을 떠넘겨 왔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인간해방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평등사회 실현,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존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무상교육을 목표로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고등교육정책 목표도 일반적인 교육정책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민나라
이회창

▷ 현 정부는 교육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켜 조령모개식의 졸속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다 현장과의 부조화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 교원의 정년단축, 잦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체 그리고 현 시대적 흐름과는 동떨어지는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정책 등으로 인하여 공교육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 또한 세계 일류의 연구대학을 만들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BK21 사업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잘해도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대학입시정책과 통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시범실시를 통한 점진적 접근을 통한 교육개혁이 무시되고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 실시방법을 주로 택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교육계의 비판과 권유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이고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당국이 독점하려 함으로써 획일적이고 현실성이 적은 탁상 정책이 남발되었고 통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말뿐이었고 아직도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진정한 대학의 자치와 자유는 구현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또한, 정부의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사상 유례 없는 교사들의 장관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반대가 심해지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장관에게 물어 경질함으로써 5년 간 무려 7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장관의 재임기간이 불과 8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특징

- 교육개혁의 일관성·계속성 추구
- 교육개혁의 구조적 제약조건 : 첫 정권교체, 소수정권 출범-DJP 연합(자민련과의 공동정부-정체성 확보 곤란)[정치적 제약성], IMF 위기[경제적 제약성] 등
- '학교붕괴' 담론의 부상과 지난(至難)한 싸움,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성과

- 범부처적 차원의 효율적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교육인적자원부 출범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로 격상,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2002. 8. 26 공포)]
- 학교운영위원회제도 확대 실시 등 단위학교 자치의 강화

- 교육기회의 확대와 다양화
- 교직사회의 분위기 쇄신 및 교원안전망 구축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학습체제 구축
- 양성평등 교육여건의 조성을 통한 여성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지속적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구축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한계 : 총괄적 평가

- 개혁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소외
- 개혁추진기구의 설정과 위상정립의 문제
- 개혁프로그램의 불충분 : 제 15대 대선공약의 실종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100대과제로 대체, IMF 구제금융위기 활용전략 불충분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잦은 교체
- 정책실명제 실효적 정착 실패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영역별 평가 : 고등교육과 학술지원정책

▷ 총괄적 성과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세계수준 고급인력육성기반 구축 추진('BK21사업')
- 대학입학제도의 다양화와 특성화 정착 : 2002년 새 대학입학제도 정착 지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방대학 육성 추진
- 국립대 구조조정 및 운영시스템 혁신 추진

▷ 한계

- 고등교육 자율화의 제도화 불충분
-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적인) 기능·역할·(사회적) 책무성 확립 불충분
- 학문분야별 차별적인 육성정책 불충분 :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
- 국가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박사학위자 증대 등 고학력실업자문제 해결미흡
- 서울대·국립대 개혁 불충분

국민통합21
정몽준

▷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제일 잘못된 것을 든다면, 그것은 교원의 정년단축입니다. 교원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에 대한 자율화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학교가 자율화되지 않았고, 공교육의 붕괴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 지방대학이 침체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권 영 길

▷ 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점은 '낙제'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제 7차 교육과정, 'BK21' 사업, 등록금 자율화 조치, 교육관계법 개악 등의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신자유주의 도입을 외치면서도 교육 관료들의 교육 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모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정책은 '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중등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통교육기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의 관점에서 의무교육을 접근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3 대학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통제적이며, 획일적이라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대학자율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자율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 창

▷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각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자율에는 스스로의 책무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집니다.
- 내재화된 자율적 통제기능을 발휘하여 대학이 스스로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노 무 현

▷ 대학교육 자율화의 제도화, 그리고 대학의 자치

- 고등교육정책은 '자율화의 제도화'를 기조로 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전면 확대하고, 학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아울러, 대학의 교수회를 법제화하여 대학의 자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우리나라 대학은 획일화된 교육제도, 교육정책과 교육전반에 대한 단선적인 인식 때문에 다양성을 통한 수월성 확보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대학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을 통한 수월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 학생선발,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대학경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여 자율화된 대학이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권 영 길

▷ 대학 자율이라고 할 때, 정부로부터 사학재단의 자율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대학 자율을 외치는 것은 대학을 통해 돈벌이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이 재단과 소수의 보직 교수들의 전횡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1999년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진정한 대학 자율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교수-대학-교직원이 함께 대학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대학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노조가 즉각 합법화되고 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어야 합니다.

4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투자 비율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고등교육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 창

▷ 지식경쟁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21세기에 대학이 지식창출의 출발점이 돼야 하며, 대학에 대한 획기적 투자 확대 없이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하려면 그에 걸맞게 대학의 재정이 풍족해야 합니다.

▷ 우리 당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GDP 1%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여, 대학발전을 기하고 지방대학의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노 무 현

▷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투자 우선순위의 탄력적 재조정,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 · 예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1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2003년 정부예산 가운데 교육부문은 24조 4,050억여 원으로, GDP 대비 4.975%임

▷ 교육재정의 GDP 6% 확충

-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임기 내에 확충하여,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예산의 효율성 · 효과성 증진

- 교육재정 투여방식을 정책목표 연계투자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교부율 인상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 에서 15% 이상으로 인상하여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대학의 자치화 등 교육체제의 개편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체계와 관련하여 유아교육 · 고등교육 관련 회계를 만드는 등 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봉급전입금을 시 · 도세 총액의 3.6% 에서 5%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교육재원 확보와 교육재정개혁 실시

- 사회적 인적자원개발 개념에 연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적자원의 집중적 수혜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분담금제도' 창설과 조세재원의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재정구조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지방대학·사립대학 지원 강화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현재 0.4% 에서 201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GDP 2%로 확대해 나갈 10개년 계획과 그 기반을 마련하고, 사립대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대학의 연계체제 연구환동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안에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중추체제이자,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2003년 예산중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입니다. 국민통합21은 GDP 대비 6% 이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육세를 존치하고, 세정개혁을 통해서 세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 증가된 교육예산은 초·중등학교 교원 처우개선과 대학교 연구개발지원 확대에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재정투자는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학교의 연구개발지원은 대학중심보다 교수중심으로 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 교육재정은 GDP 대비 7%는 확보해야 합니다. 2001년 기준으로 본다면 GDP가 545조 원이므로 38조 원 정도입니다. 최근의 교육재정에 비추어 10조 원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 도입, 각종 탈루 세금 징수, 세제 개편, 군축 등을 통해 최소 34조 3천억 원의 이상의 추가세수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표 1>). 추가 세수로 확보된 34조 원은 교육, 의료, 주거 등 여

러 분야의 공공성을 차츰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교육재정 중 대학 재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써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검토를 끝내지 못한 점도 있고, 교육재정 중 대학 재정비율 몇 %, 중등교육 재정비율 몇 %가 미리 정해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교육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 1〉 재원마련 방안

부유세 신설	11조 원
• 탈루세액 징수	8조 5천억 원
• 군축(군복무기간 단축, 방위력개선사업 감축 주한미군지원비 총액 삭감)	8조 8천억 원
•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4조 3천억 원
•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1조 7천억 원
계	34조 3천억 원

5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간에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립별 대학간 역할분담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 창

▷ 국 · 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 · 공립대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 하며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국 · 공립대는 기초학문의 지원과 소외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책필요에 의한 인적자원 육성, 기초학문분야의 육성,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교육욕구의 충족,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기회 보장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반면에 응용과학 기술 분야와 전문직업 분야는 사립대학간 경쟁을 통하여 등록금 자율화, 연구기금의 자체조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대학에 대한 지원은 '집중과 선택'의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 ·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조정을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수요가 많은 응용과학 기술과 법대, 의대, 경영대와 같은 전문직업 분야는 경쟁체제로 발전하도록 하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으로서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가 낮은 분야에 국한해서 정부가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 무 현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정립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특징적으로 국립대학은 '평등'의 가치를, 사립대학은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설립주체별 특성화와 차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보완적이면서도 한국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승효과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역할분담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모든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21은 국립대학의 재정은 중앙에서 지원하되, 국립대학에 대한 행정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학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활성화는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국의 사립대학은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궁극적으로 사학의 운용이 투명화된다는 전제 아래 자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 영 길

▷ 민주노동당은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간 서열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6번 답변 참조).

▷ 지방대학 또한 장기적으로 국·공립화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공립화 이전에는 지방대학을 몇몇 분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의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 창

▷ 지방대학 공동화(空洞化)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 공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학 육성은 민·관·산·학(民·官·産·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당은 먼저 지방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역기업체의 지역인력 채용 권장 및 해당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교육여건의 향상과 지방대학간의 교류, 협력체제의 구축, 지방대학 육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대학의 난립억제, 수도권 집중 공공기관·기업의 분산화 등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리 당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삼는 것은 장학금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원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거주 서울, 수도권 학생을 위하여 지역 내에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공동 기숙사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무 현

□ 지방대학 네트워크체제에 대한 지원확대

▷ 지방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하여 중점육성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의 네트워크 연구활동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교수 학생의 실질적 교류, 학점의 상호인정, 공동학사(學事)관리·운영 등을 확대·강화하는 등 지역적으로 대학의 실질적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안에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중추체제이자,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투자우선지역 법제화

- 농·어촌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교육소외계층, 지역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사회적·교육적 평등성을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교육투자우선영역·지역(Education Zone)을 설정하여 교육투자를 집중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지방대학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불균형한 발전과 함께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대학발전과 지역경제균형발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방소재 국립대학은 도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이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대학은 특성화를 모색하면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권 영 길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별 대입할당제, 지방대학 공직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포괄적이고도 세세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형태가 한시적인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인지, 지방대학을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학이 육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학벌문제와 대학 서열체계의 극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립대학부터 평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학생들은 그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선발시 특정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인문학 및 이공계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현상으로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의 위기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기초학문 육성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회창

▷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일본은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여한 데다 올해에는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과학입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기초과학에 240조원 가량을 집중 투자한 국가적인 지원과 묵묵히 연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래 성장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사급 고급인력의 77%가 속해 있는 대학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창의적 과학기술교육강화와 우수과학영재 교육, 신진과학자의 발굴 및 수용체계 확립,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대학의 기초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시키는 연계체제의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초과학 및 이공계열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계열간 교차지원 축소, 자연계열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혜택 부여, 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시 내신 불이익 개선방안 모색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 전략분야(IT, BT 등) 대학과 대학원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민간부문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과 대학원 정원의 조정 권한을 대학자율에 이양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발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 무 현

□ 기초학문과 인문학 육성 강화

▷ 기초학문과 인문학은 한 나라 국가발전과 학문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사회적 성공에 연계된 실용적 학문만이 선호되는 현실에서 기초학문과 인문학의 발전은 국가의 지원으로 튼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기초학문과 인문학 육성·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인문학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다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공부가 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것에 비하면 경제적 대가가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이공계 출신에 대한 대우가 의학계, 법조계, 상경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공계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기술고시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부처 내에서 기술직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공계에서도 경영경제에 대한 소양이 함양되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권 영 길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2000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 대비 기초 연구개발비 비율이 12.6%, 대학의 연구비는 11.1%로서 일본 및 미국에 비해 다소 저조하며 유럽에 비해 매우 낮아 근본적인 연구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8위, 일인당 연구개발비는 21위에 속하고,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G7의 평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로서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해 약 10%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기업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회의 필요에 부응한 장기적 연구개발보다는 기업의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기초연구가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특허법 개정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교육진흥법' 등은 산학협력이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보다는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기초연구를 축소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 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구의 분야별 편중 현상 심화, 기초연구 인력의 유출, 청년 과학기술자의 실업, 이공계 기피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근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근본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외 과학기술 종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대책

▷ 기초연구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의 근본적 기반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장기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그 확대분 15%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학과 기업이 기초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허법 개정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교육진흥법' 등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해 대학의 기초연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 대신,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역 주민, 노동조합, NGO·NPO 등의 요구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대안적 기구— '과학상점' —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 이후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희 창

▷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날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이공계통의 산업일꾼들의 땀에 의해 이룩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최근에 우수인재들이 이공계통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가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우리 한나라당과 저는 이공계 우수인재 개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 초·중·고 과학교육 강화와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대학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능력 배양과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 과학기술자가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창출을 확대하고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사업의 확대와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과학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성공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공계 진학에 대한 장학금, 해외연수, 병역특례 등의 유인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을 장래의 과학기술자로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공계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이공계 출신자들의 지위 향상 통로를 확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무 현

▷ 이공계 (대학) 진출 촉진체제 구축

- 과학기술 우대 차원에서 ①발명교육을 비롯한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②과학영재교육과 이공계 대학간의 연계성 확보 등 과학영재교육체제의 구축과 ③우수과학도 지원 강화, ④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등 산업과 연구 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⑤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등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능력 향상, ⑥장학금 지원 확충과 병역특례 확대 등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창조적 이공계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국가라는 국가적 Agenda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아래와 같은 실천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① 정부의 기술고시 선발인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현재의 6 : 1 비율에서 1 : 1비율로 조정함. 일본의 경우 1 : 1임)하여,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선발하고,

정부의 주요 산업/과학 기술부처에 배치하여 정부 각 부문의 전문성 확보

②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신기술 재교육 및 능력향상 기회확대. 기능중심 재교육에서 발전적인 신기술 중심 재교육으로 확대 개편

③ 특허 및 보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립(발명자 지분 50%로 상향조정)

④ 민간기업의 R&D 비용과 연구수당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시행

권 영 길

□ 현황과 문제점

-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며 다른 직종에서 재교육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학기술자 양성 정책은 짧게는 대학원에서부터, 길게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공계 위기'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연구개발인력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처우가 낮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여러 대안들이 과학기술자들의 전생애적인 대안 또는 과학기술자 전체를 위한 대안이 되기보다는 역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스타과학기술자 만들기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물론, 역할모델이 갖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현재 과학기술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팀 작업이 일반적이라는 연구활동의 속성 때문에 일부 엘리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팀의 전체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부 과학기술자만 스타로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 대학만 졸업한 일본인 다나카 코이치의 노벨화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연구활동의 성과는 단지 학력, 학위 등 눈에 드러나는 지표만을 강조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 최근 발표한 '국내 이공계 대학 기피해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그동안 자주 지적 받아온 우리나라 이공계대학원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 학문후속세대인 이공계열 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 연구개발인력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에서부터 비리와 편법을 더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교육과정이 현재의 이공계열 대학·대학원생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 대책

▷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BK21에서 조장하는 연구실 내의 경쟁을 철폐하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이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장학생제도를 개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200~300명 정도의 현장 과학기술자들을 선발하여 정부, 의회, 시민단체, 언론단체, 노동계, 외교, 국제협력 관련 분야에서 1~2년씩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지식을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사회의 대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급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휴직으로 처리하여 운영함).

▷ 소수의 스타를 만드는 과학기술자 지원정책보다는 과학기술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의 현실과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최근에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 창

▷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유일한 신분상승의 기회로 보는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과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신중하게 도입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여입학제를 도입한 경우, 정원의 조정문제, 기여금의 산정문제, 기여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문제, 확충된 재원을 가난한 학생을 위해 활용하는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급히 기여입학제를 도입한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자녀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여입

학제가 실시되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만 증폭 될 수 있습니다.

▷ 대학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기업과 사회가 대학육성을 위한 기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노무현

□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 문제

- 연세대를 비롯하여 몇몇 사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이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8% (대학 운영수입 대비, 2000년 결산기준, 부속병원 전입금·임상교수 인건비 전입금 제외하면 4.5% : 교육통계연보)에 불과하고 많은 대학들이 재단전입금 거의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나, 이는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재단전입금이 1%에도 못미치는 대학 37.4%, 0%는 6.1% : 조사대상 100개 대학 기준
- 오히려 대학입학선발방법의 자율화와 다양화 차원의 문제입니다.
- 교육이 거의 유일하게 열려 있는 사회이동의 통로라고 믿고 있어 교육기회의 균등에 상당히 민감한 우리 국민의 정서상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사실상 (정치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학발전기금 모금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여입학제로 기부금 입학이 활성화되는 사립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외적 조건으로서) 격차와 위화감 등도 현실적으로는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여입학제는 '비물질적 기여'로부터 확대해 나가 이 제도 수용기반이 형성되면 '물질적 기여', 즉 '기부금입학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미 대학입학선발전형제도의 자율화와 다양화 및 특성화 차원에서 해당 대학에의 기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적·사회적·교육적 기여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 추세를 확대해 나면서 해당 단위 대학에의 기여를 대학입학선발전형에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학개혁을 통해 재정운용 등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공성·민주성이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우리나라는 지나친 학벌주의와 대학경영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여입학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영길

▷ 이미 교육이 계층과 신분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77%가 대도시 출신이고, 53%가 전문직, 대기업체 이사,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이며, 생산직 노동자는 8%, 농민은 3%에 불과합니다.

▷ 연세대 등이 도입하려는 기여입학제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이 가진 자들의 세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화, 장기적으로 대학의 무상교육화를 통해 평등한 고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사립학교법 개정 및 교수노조 문제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회창

□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된 이래 18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않고 학교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결코 부패사학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오히려 부패사학에 관해서는 철저한 법칙과 함께 비리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과 감사를 통해 비리사학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관련 법안을 두고, 이 같이 극한적인 충돌이 야기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법의 생명인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교육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없이 한쪽 주장만 수용함으로서 의료대란과도 같은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와 한나라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공금횡령 등 회계부정, 교수·교사 임용비리, 입시부정 등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척결하고 응징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 교수노조 문제

▷ 교수노조문제는 2년 전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가 합법화한 것처럼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봅니다. 교수노조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수노조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교수직에 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됩니다.

- 이 문제는 세 가지 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교수가 노동자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회지도층인 교수들이 법을 어기고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교수노조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당은 교수는 고도의 전문직이므로 노동자 성격이 강조되는 노조보다 전문직 성격이 부각되는 전문직 단체의 결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직은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 직업윤리와 전문직 단체를 특징으로 합니다. 의사의 경우 노조가 허용돼 있지만 협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수노조 설립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을 노조설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들이 노조활동과 같은 집단의 힘에 의지하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노조결성의 이유로 드는 것이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에 따른 신분불안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의 기간제 임용제에서는 교수가 다소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돼도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계약제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부당한 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분불안과 학문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교수들도 교수노조에 대해 53%가 부정적이라는 지난해 한 전문지 여론조사 결과처럼 아직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교수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에 있습니다. 경제적 보수 못지 않게 명예와 자존심이 중시되는 직업입니다. 교수노조가 교수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일부 하겠지만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 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한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재정에 대한 재단의 책임은 미미한 현실에서,

- 중·고등학교의 40%, 전문대의 96%, 대학의 77%가 사학인 현실이고,
- 사립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중 98%가 학생등록금과 국고지원이고, 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8% 수준입니다.

▷ 재정부담률이 낮음에도 각종 비리와 분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 지난 10년 동안 전체 대학의 10%에서 비리·분규가 발생하였고,
- 덕성여대 등 고질적이며 장기화되는 학원비리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교수권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신 분들이 우리 교육에 이바지한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이나,

- 사학에 대해 '사유재산권'·'교주' 등을 운운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는 것은 21세기의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온당치 못합니다.

▷ 현 '사립학교법'은 비리를 일으킨 임원의 승인취소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고조치를 두어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으며, 비리당사자가 2년이 경과하면 학교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시이사의 2년 중임 임기규정을 두어 구재단이 임시이사 흔들기를 통한 재복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학교운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 재정, 인사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사학법인에서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행사·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비리·분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 아울러, 사학의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 현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공개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사학개혁 : '사립학교법' 개정

-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①사학재단의 독점적·배타적 권한과 운영

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학의 경영과 학사를 분리하고, ②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복귀를 제한하여 사전·사후예방하며, ③학교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④교직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사학개혁을 하겠습니다.

▷ '사학진흥법' 제정

–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며, 조세감면 등을 포함하여 초·중등·대학의 사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사학 교원 선발·임용의 공공성 제고

– 사학의 교원 선발·임용의 합리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학연합기구에 의한 엄정한 공개전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사학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사교류 확대

– 사학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공·사립학교 사이에 교사교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교수노조의 문제

▷ 2001년 '전국대학교수회'가 창립되고(4.1) 교수노조가 출범하였음(11.10)에도 아직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는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들은 그 동안 교수회의 의결기구화와 법제화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성 차원과 대학공동체 구성의 복합성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임의기구법외노조로 출범한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와 맞물려서 교수회의 법제화·의결기구화('고등교육법' 개정사항임)가 제기될 것인 바,

▷ 대학의 교수회를 법제화('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되, 의결기구화는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의 각 구성원들인 학생회, 직원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도입하여 최고의결기구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는 법제화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겠습니다.

▷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 신장·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교수노조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검토하여 교수노조의 교육정책 참여의 제도화 문제를 비롯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학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검토·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사립학교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경영에 따른 위법자는 일정기간 동안은 대학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합니다. 또한 대학재단이사회가 창업자 또는 이사장 가족 중심으로 되지 않도록 그 비율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교수회의 법제화에 있어서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단위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 사학의 세습과 족벌 운영은 공공적 영역인 교육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학이 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념을 실천해야 함에도 세습과 족벌로 부패와 전횡을 낳고 있는 현실은 서둘러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사학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여 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주요 내용은

① 학교법인 이사의 2분의 1을 대학의 경우 교수회와 직원회가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여 일인 설립자·이사장 위주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② 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칭)·직원회,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여, 학교 운영에 학생·학부모·교사·교수·직원 등이 권리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의 균형 있는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대학의 경우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④ 현행 사학 법인의 이사 등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관한 요건 중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시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⑤ 비리 · 분규 당사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부패가 재발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당사자가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욱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판단하여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규정을 강화한다.

⑥ 이사회가 전원 임시이사들로 구성되었다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대학의 경우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함으로써 교사회 · 교수회가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⑧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 ·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 · 결산서를 공개할 때, 산출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사학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 교수노조 문제

-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 33조 제 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로써 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의 신분인 국 · 공립대 교수와 이에 준하는 사립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교수노조 허용여부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교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만 하면 됩니다.
-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여부는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이래 우리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ILO로부터 이들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OECD에 가입할 때 국제적 수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 문제는 교수계약제 시행으로 교수가 법적으로 고용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관계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직 노동자인 교수 전체를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로 강제하는 계약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는 교수노조의 합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1 IMF 이후 현재까지도 대졸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휴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 화 창

▷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대졸 실업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올해 취업을 원하는 대졸예정자와 대졸 취업재수생을 합친 43만 여명이 구직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는 많지 않아 실업대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인턴사원 보조금 지급, 주 5일 근무제, 한 회사 한사람 더 고용하기 등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2.7%로 낮아졌으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졸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면 첫째, 고학력자의 과다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학교육과 산업인력 수요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업의 채용관행이 정기에서 수시 채용으로, 신규대졸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하여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 선호의식의 팽배로 지방대생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대졸실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 삼위일체 전략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기술과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장·일자리·따뜻한 복지'가 일체를 이루는 '활기찬 경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 고용의 고급화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길러내고 단순한 일자리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때 대졸실업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 고용의 구조안정화입니다. 구조적인 분제인 대졸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단기적 처방은 어느 정도 용인하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미래 산업 관련 교육훈련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 차별 없는 고용시장 구축입니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경제 환성화로 고용창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노무현

□ 대졸실업자 대책

▷ 주 5일 근무제 도입, 일 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포함하여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나가고, 경기환성화를 통해 대졸자 실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 대학교육의 특성화에 산업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 운영을 연계해 나가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제도 개편으로 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는 자격종목을 대폭 정리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 자격기준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시장) 및 활용(노동시장) 연계 강화 차원에서 직업능력표준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자격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공인자격 등 각종 자격의 수준평가를 통하여 동일 수준간에는 동일한 직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격의 통용성·호환성 등을 확보하는 '수준평가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환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 자격기준의 설정·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산업계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민간위탁 환성화, 국가간 상호 자격인증 확대 등으로 선진적 자격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학력과 자격의 분화 촉진이라는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자격이란 인적자원의 능력지표로서 인적자원 양성(교육훈련시장)과 활용(노동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준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격관련 법제(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분리 소관)를 정비하여, '자격기본법'(1997. 3)과 '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을 통합한 통합자격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프로그램(청년인턴제, 산학연계활동 지원, 취업알선시스템과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교육과정에서 '직업세계'에 관한 교육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학벌·학력위주의 교육체제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대졸실업자 등 청년실업이 일반 실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인구 구성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듯이, 경제구조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이 진행되면서 청년 등 신참 근로자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제의 환성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는 2중 구조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 대졸 청년들을 위한 벤처창업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2조원 규모).
- 청년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는데,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영길

▷ 외환위기 직전 62~63%(1사분기 제외)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후 61%대로 떨어진 뒤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율은 2001년 1/4분기 9.0%, 3/4분기 6.8%로 일반실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 이는 특히 기업주들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신규 채용보다는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신규 졸업자 채용 비율이 65%, 경력직 채용 비율이 35%였으나 2000년에는 신규 졸업자를 26%, 경력직을 74% 채용하고 있습니다.

▷ 실업 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업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업급여를 현실화하고, 재취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실업장에 대한 재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실업의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의 대폭 확대(교육, 의료, 복지 등)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12 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등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회 창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생산의 근원지인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다른 나라에 뒤쳐지고 맙니다.

- 이를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존의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과 국가만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점에서 대학은 외국대학과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며, 필요하다면 외국의 유명대학들이 국내 대학에 분교 등을 설립하여 한국의 대학들과 경쟁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국의 대학들 못지 않은 시설과 설비, 교수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 그러나 일시적으로 모든 문호를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자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개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 무 현

□ 고등교육시장 개방문제

▷ 우리나라 대학원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국가전략분야는 우수한 외국 대학원들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 대학원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은 하되,

-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대학과 대학원의 일반 개방은 우수 대학원 유치방안의 운영성과와 국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면서 WTO 교육서비스 차원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고등교육재정 확대·강화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현재 0.44%에서 201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GDP 2%로 확대해 나갈 10개년 계획과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교육의 특성화 지원

▷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조개편과 특성화 및 역할분담을 촉진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특성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를 적극 촉진하겠습니다.

□ 대학교육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체제개편과 발전방안을 비롯한 고등교육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획·심의·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 구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학평가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1999년 설립)·한국간호교육평가원(2001년 설립)·'한국의학교육평가원'(ABMEK, 설립 추진중)으로 이어지는 부문별 전문적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교육의 질관리체제를 유도·지원·강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일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 대학 졸업자의 질 관리 차원에서 A/S(After-Service) 프로그램, Recall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풍토가 정착되어 감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연수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사회적 인적자원개발 개념에 연계하여 학교교육 특히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적자원의 집중적 수혜기관(예를 들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분담금제도'를 창설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지원 재원으로 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학교행정에서의 자율화를 통해서 교육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율화와 다양한 교육수요의 추구 일환으로 한국의 교육시장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장개방전문가들은 '하바드 서울분교', 'MIT 제주분교' 등이 과연 한국에 들어오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언어나 생활 여건 면에서 열악한 한국에까지 와서 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더욱이 모든 교육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 놓는 한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

한 매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대학보다는 어학, 디자인, 패션 등 비정규 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 영 길

▷ 민주노동당은 교육시장 개방에 반대합니다. 직업계·예능계 학교, 어학연수원 개방과 외국대학 설립 허용과 같은 기존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입니다.

- 교육은 공공 영역으로 외국대학 유치 등은 교육을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는 기본권으로서의 공교육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인데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보장성과 평등성을 박탈하고, 이미 공적영역으로 포섭되어 있던 교육영역마저 시장영역으로 내몰아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축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교육권 훼손 및 축소를 막고 나아가 공교육의 강화,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교육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 2004년까지 협상하기로 되어 있는 서비스 협상 내용에 교육시장개방 문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한국은 IMF 이후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가 있고, 협상전략만 잘 짠다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 분야에 대해서 개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우수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우수한 학생, 둘째, 교수진, 셋째, 연구 및 교육 여건의 총합이 대학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 학생의 자질이나 소양은 외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창의성을 억눌리고, 막상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는 입사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 창의적인 학업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학제 및 학업내용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교수당 학생수와 강의시간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유명대학에 비견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수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과 그를 통한 연구 및 교육 시간의 보장이 우리나라 대학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언젠가 책 살 돈을 벌기 위해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 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외국 고등학교만도 못한 도서관을 전전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여건을 개선해야 교육이든 연구든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아이비리그에는 아이비리그의 특성화된 전공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나 캘리포니아 대학 역시 특정한 학문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들의 서열 몇 위를 매기는 등과점일 뿐입니다. 어떤 학문을 하려면 어느 대학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상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 경쟁력 확보라 생각합니다.

13 외국의 대학들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관계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국처럼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회 창

▷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 비영리 · 공익법인보다 더 넓은 조세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24시간 불꺼지지 않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대폭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혜택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 무 현

▷ 대학의 세제혜택 확대 방안

-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대학에 보탬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국민통합21은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대학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도 물론 고려하겠습니다.

권 영 길

▷ 원칙적으로 대학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일부 사학의 경우, 이러한 세제혜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연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대학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생각하시는 향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 우리 당은 당분간은 현행 대입정책의 기본적인 구조는 계속 유지하되, 임기 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겠습니다.

- 특히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고 복수 응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무현

▷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현행 대학입학선발제도와 대학수능시험체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 고교까지의 국민보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졸업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대학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개방형 시험화 등 여러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 정부에서 2005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만 주고, 집권하면 교육계의 의견을 들어가며 각계의 전문가들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그동안 유지되어 온 대학입학선발제도의 대학 자율화·특성화·다양화 기조는 대학의 자치와 고등교육 자율화의 제도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대학수능시험을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여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겠습니다.
- '대학입시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전형·선발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검토·모색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 몽 준

▷ 국민통합21은 획기적인 대입제도 개선보다도,

①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② 수능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③ 점차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 수학능력시험은 만약 그간의 여러 정부가 잘 운영해 왔다면, 지금쯤은 충분히 좋은 전통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시험의 근간으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수능시험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수능시험의 전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들 사이에는 언제 다시 본고사가 부활되는 게 아닌가 불안해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좋은 입시제도의 전통을 쌓아오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권 영 길

▷ 국가 주도 대학 입학 시험(현행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하고, 중등과정 졸업 자격고사, 즉 중등 교육과정 이수한 후 자격 여부를 묻는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 졸업 자격 고사는 지역 단위로 출제하고 현직 중등학교 교사들이 채점해야 합니다. 대학입학은 무시험,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개선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 합격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15 대학 강의에 있어서 대학전임이 아닌 외래강사 의존율은 2001년 현재 약 40%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문제가 있으며, 한창 연구해야 하는 젊은 박사급 전문인력의 연구능력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사급 실업문제나 시간강사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박사급 전문인력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나라

이 회 창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대학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수준의 취업시장에 기웃거리는가 하면, 국내외에서 어렵사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두뇌들이 대졸 취업창구에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등 최근 들어 취업현장에서의 학력파괴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일부 업체에서는 석·박사 학위에 부담을 느껴 아예 처음부터 이들을 탈락시키는 사례까지 생겨나 '고학력자 수난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데다 인력양성체제와 산업현장의 수요사이의 틈새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 우리 기업들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보다 전문대 이하의 중간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구조는 이미 대학중심으로 옮겨져 양자간에 큰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기업이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이런 인력수요를 흡수한다면 고학력 실업자들의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창업을 통해 스스로 사장이 되는 길이며, 이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한 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상품화되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풀(poo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무 현

□ 대학강사의 위상 정립과 복지제도 확충

▷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의 고정적 직업군화되어 있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대학 강사가 교육자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 나가며, 박사급 전문인력을 비롯한 학문후속세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교수제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를 보완하겠습니다.

▷ 교수확보율 확대와 강사의존율 축소 등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계약기간의 확대, 강사료의 현실화(방학기간 포함)와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화,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한국의 대학들이 대학전임이 아닌 외래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2001년 현재 약 40%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전임강사 비율을 특정 비율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대학이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정책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박사급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몇 년간 프로젝트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영길

▷ 현재 교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교수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박사급 전문인력과 시간강사문제는 교수 수를 늘림으로써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재정 확보는 〈4번 답변〉 참조.

16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및 해외 고등교육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은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건의하였으며, 대학평가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각종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발전에 있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한 견해 및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인 대교협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회창

▷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교육협의회의 활동에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대교협을 정부사업에 참여시켜 역할을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추진과정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노무현

□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인 대교협의 역할 지원·강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을 연구·개발·건의하고, 대학평가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각종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발전에 있어서 유사국가기구의 역할을 해 온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학평가체제를 전문화·정성화(定性化)·특성화

하며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회원대학의 협의체 성격임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학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등교육 관련 전문연구기구의 설립이나 전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및 해외 고등교육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대교협은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고, 대학평가제도를 정착시켰으며, 대학입시 관련 업무 등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학의 연구·개발업무의 효과제도,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제언 등에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권영길

▷ 특별히 검토한 바 없습니다.

17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하는 고등교육관련 교육공약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 금번 우리 당 대선 공약 중 고등교육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학발전 예산을 GDP의 1%까지 투자하도록 할 것이며,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것이고, 대학교수의 법정확보율을 지키도록 하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무현

▷ 대학 서열화 극복

-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극복하는 다양한 방안을 '대학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모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 교육의 지방자치화를 통해서 각 지방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선진국 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결집시켜서 수월성 있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중등교육을 받는 기간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는 기간에 훨씬 더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학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 전문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2001년 제안된 전문대 발전방안은 실제적인 전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방안임으로 철회한다.
- 전문대 발전을 위해 전문대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바른 전문대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전문대교육발전위원회 설치(전문대 주체 참여 보장)
- 전문대 발전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사학청산법' 철회
- 전문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 : 재단 전입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사회 기부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문대 인권 및 학생자치권 보장, 비민주적 학칙 전면 개정을 강제함. 부당한 학생자치권 및 인권탄압 법적 처벌
- 부당 해직 교수 및 재임용 탈락자 원상 복직

〈별첨〉

대통령 후보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서면질의서

1.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대학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통제적이며, 획일적이라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대학자율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학자율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현 정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을 5%이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자들은 GDP 대비 교육재정을 6~7%까지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GDP 대비 0.44%로 OECD 국가평균인 1.06%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재출한 2003년도 교육관련예산안은 24조 3천7백39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8천4백57억 원(8.2%)이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비는 대부분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대학관련 총 예산은 2조 5천4백억 원에서 2조 3천5백억 원으로 2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율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고등교육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간에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설립별 대학간 역할 분담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의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인문학 및 이공계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현상으로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의 위기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기초학문 육성 대책은 무엇입니까?

8. 우리 나라에서는 IMF 사태 이후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국내 대학의 현실과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최근에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교수노조 문제 등에 대하여 대학구성원간의 입장이 상이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및 교수노조 문제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11. IMF 이후 현재까지도 대졸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휴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12.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외국 우수대학원 적극 유치' 방침을 발표한 후로,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가 교육계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등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하여 _____대통령 후보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13.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재정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들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관계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국처럼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4.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학 강의에 있어서 대학전임이 아닌 외래강사 의존율은 2001년 현재 약 40%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문제가 있으며, 한창 연구해야 하는 젊은 박사급 전문인력의 연구능력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사급 실업문제나 시간강사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박사급 전문인력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_____대통령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6.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및 해외 고등교육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은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건의하였으며, 대학평가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각종 교육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발전에 있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한 견해 및 고등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인 대교협에 대한 _____대통령 후보의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17. 대통령 후보께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하는 고등교육관련 교육공약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서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